

“간호사 헌신에 깊은 감사...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아”

“의료현장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 위로”

“간호사 결연 항상 국민이...정부, 최선 다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으로 생긴 진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렇게 적은 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

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어 달라”면서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끝까지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상의 문제보다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며 간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과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전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용 간이음압격리병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김종인, 정책 협치에 동의...이것이 협치의 시작”

“정책으로 협치 범위 넓혀가야”
“진정성 갖고 국회 권한으로 의료계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라며 대야(對野)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공개 부분 종료 전 추가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께 세 가지의 정책 협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세 가지 정책협치는 ▲4·15 총선 공약의 공통사항 입법화 ▲통합당의 개정된 정강정책과 민주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 또는 근접 사안의 조기 입법화 ▲비상경제·균형발전·저출산·에너지 등 국회 내 4개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이다.

이 대표는 “어제(1일) 야당 지도자들을 차례로 뵈고 취임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포함한 5개 정당 책임자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게 있다”며 “위기 극복에 협력하고 민생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도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시급성이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협치를 통해 협치의 범위 점차 넓혀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의 방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라며 “그 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지금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국민들께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계신 것처럼 환자들도 눈물로 의사들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의 진료 거부가 더욱 더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어제 통계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다시 약간 늘어났다”며 “거리두기 효과가 더 확실해지고 코로나19가 훨씬 더 진정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국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류호정 원피스’ 논란 한 달 “국회 의원 복장 ‘최소주의적’ 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분석 해외서도 논란 발생 후 규정 신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서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분회회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월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 복장으로 분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복장 규정(dress code)’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등원한 의원을 둘러싼 복장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등원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 복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의장 직권으로 기존 관행을 완화시킨 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 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복장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은 2018년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 및 군복·유니폼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도 2018년에 개정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분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인 외출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